

한 · 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명확한 분석 없이 한·미 FTA의 긍정적 영향만을 과장하면서 상품과 서비스라는 무역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아래 국가 공공의 영역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 노동관계와 식량주권 등의 부문까지 협상을 진행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또한 정부의 자세는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지 않은 채 아무런 국민적 합의가 없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농업 부문 협상은 국민 모두와 미래 세대의 안녕 및 건강과 직결되는 보편적이고 절박한 문제이며, 농촌사회와 농민들은 한·미 FTA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국가 이익을 위해 농민들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며, 농민들의 FTA반대를 농민집단의 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미국 측에 끌려가는 정부의 한·미 FTA 협상의 즉각 종단을 요구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1. 정부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국민 건강과 안전, 노동관계 등 공공 영역의 국민 주권의 상실을 초래하고, 농민·농촌·농업을 포기하는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태국, 남아공, 멕시코 등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한·미 FTA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세세히 검토한 뒤 국민들의 뜻에 따라 FTA 추진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하라!
1.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지역, 먹거리 체제, 공공기관 급식, 농산물 유통 등 먹거리 관련 제도 전반을 개혁하는데 앞장서라!
1.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7만 군민과 함께 강력히 대처할 것을 밝힌다.

2006. 11. 17

경상남도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